

6·2 지방선거 수도권 이변, 숨은 표인가? 변한 표인가?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제5회 지방선거 서울/경기 지역 패널 1-3차 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2010. 6. 24



6·2 지방선거 수도권 이번, 숨은 표인가? 변한 표인가?

‘親MB-정권심판론자’와 ‘反야당-反MB 정권심판론자’의 선택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제5회 지방선거 서울/경기 지역 패널 1~3차 조사>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

예측에 실패한 6·2 지방선거, 숨은 표인가? 변한 표인가?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최대 관심은 시종일관 역대 지방선거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인지, 여당의 승리로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장이 될 것인지에 집중되었다. 여당은 50%에 육박하는 국정지지율과 앞선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중간심판의 장이 되어 온 역대 지방선거패턴과 달리 경제와 안보를 살릴 정부와 여당의 승리를 자신했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권심판이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과는 여당은 수도권 2곳과 지지기반이 강한 대구, 경북, 부산에서만 승리하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이번(?)을 연출하며 막을 내렸다. 개표결과 애초 박빙으로 분류된 강원, 인천 등에서 야권후보가 낙승하고 압승이 예상되었던 서울에서 0.2%P차, 경기에서 4.4%P의 근소한 접전이었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의 전망과 실제 개표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브래들리 효과’, ‘숨은 표 10%론’, ‘미네르바 효과’, ‘침묵의 나선’ 등 한국 선거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낯선 가설들을 동원하여 충격적인 선거결과를 설명하는 논리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물론 예측되지 않은 현상을 새로운 가설, 새로운 이론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가설, 기존의 조사방법 전체를 부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마치 검증된 결과인양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

이들 가설들은 선거예측이 틀린 이유를 기본적으로 야당후보를 선택한 표심의 상당수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감춘 ‘숨은 표’의 존재에서 찾는다. 차이가 있다면 숨은 표를 잡을 수 없었던 조사방법의 한계에 주목하거나(여론조사 한계론),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한 정치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미네르바 효과-표현의 자유, 브래들리 효과-사회적 규범, 침묵의 나선 이론-소수의견 억압)에서 강조점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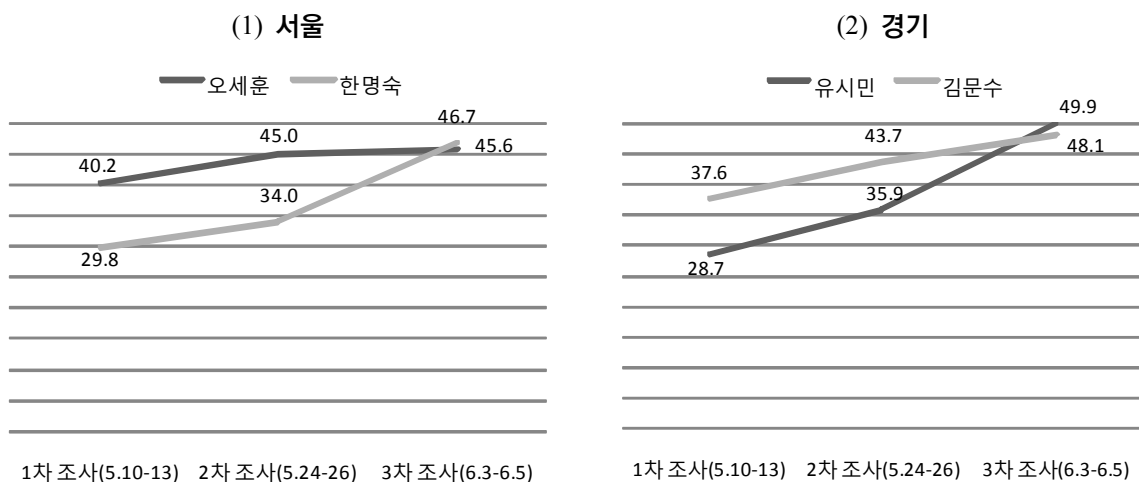
그러나 이 글은 이번 지방 선거의 이번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당 후보 지지자를 못 찾아 내거나 찾을 수 없게 만든 ‘숨은표 효과’ 때문이 아니라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유권자들이 투표 전 일주일 사이에 야당후보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정한 ‘표심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림1]은 가장 큰 이번으로 주목받은 수도권에서의 패널조사에 기초한 지지율 변화추이



를 보여주는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1차 조사(5.10-13)와 2차 조사(5.24-26) 시점 사이의 조사결과를 보면 같은 시점에 실시된 일반 전화 조사에서 이들 후보 지지율이 15~20%p 격차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패널조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지지율 격차가 훨씬 적었다. 1차 조사의 경우 1, 2위간 지지율 격차가 서울에서 10.6%p, 경기에서 8.9%p로 나타났고, 2차 조사에서 서울에선 11.0%p, 경기에선 7.8%p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지율 격차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선거전 일주일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더구나 실제로 선거직후(6.3-5) 실시한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한명숙 후보, 유시민 후보 지지율이 급증했으며 선거마감에 여야 후보 사이에 박빙의 경쟁 구도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매 조사 시점마다 다른 응답자를 모집하여 조사하는 일반 일회성 조사는 두 시점의 조사결과가 달라져도 실제 여론이 변화한 것인지 매번 모집한 응답자들의 특성이 달라선 생긴 변화인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모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 나타난 조사결과의 차이는 실제 응답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인 근거가 된다.

[그림1] 6·2 지방선거의 지지후보 및 투표후보 변화 (서울/경기지역)



그렇다면 TK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높은 국정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후보 경쟁력에서도 야권후보를 앞서고 있어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 서울, 경기에서 누가, 왜 선거 막바지에 표심의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가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모집한 1,200명 패널 중 2차, 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801명의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이변을 가져온 표심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경험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50% 지지율 대통령은 왜 심판받았나?

수도권 투표 반란의 주역은 누구인가? ‘親MB-심판론자’와 ‘反야당-反MB심판론자’

투표 일주일 전까지 MB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우세했던 상황이 왜 투표 당일까지 이어지지 못했을까? 정부와 야당 각각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동시에 이탈할 요인을 갖는 양면적,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의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의 선거전략이 급격하게 공세적으로 전환한 데에 대한 반발(protest)과 균형(balancing)잡기 여론이 활성화된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핵심주장이다.

이렇게 상호 모순적인 경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일관성을 가진 유권자들에 비해 후보 선택과정에서 보다 많은 갈등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동층과 유동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보통의 선거라면 실제 투표과정에서 이들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권을 하거나, 양 극단 중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보다는 상쇄됨에 따라 선거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부여당의 선거전략이 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견제심리를 크게 자극하면서 선거 막바지에 야당후보 지지로 쏠릴 수 있었고 이것이 수도권의 이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MB 지지 및 정권심판론 공감도에 따른 유권자 유형 분포 : 서울/경기 794명

MB 정권 심판론에 대한 태도			
		정권안정론 277명(34.9%) MB 정권심판 비공감	정권심판론 517명(65.1%) MB 정권심판 공감
MB 국정지지	親MB 국정 지지 420명 (52.9%)	親MB 안정론 (250 명) 親MB의 59.5% 정권안정론의 90.3% 전체 유권자의 31.5%	親MB 심판론 (170명) 親MB의 40.5% 정권심판론의 32.9% 전체 유권자의 21.4%
		한나라 핵심지지층 (한나라당 지지) 200명 친MB안정론의 80.0% 전체의 25.2%	反한나라당 성향 (무당파/야당지지) 50명 친MB안정론의 20% 전체의 6.3%
MB 국정지지	反MB 국정 반대 374명 (47.1%)	反MB 안정론 (27명) 反MB의 7.2% 정권안정론의 9.7% 전체 유권자의 3.4%	反MB 심판론 (347명) 反MB의 92.8% 정권심판론의 67.1% 전체유권자의 43.7%
			야당 지지층 (민주/민노/창조/참여) 208명 反MB심판론의 59.9% 전체의 26.2%

*주 :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경기 794명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데이터



수도권 유권자 5명 중 1명은 ‘친MB 성향’ 과 ‘정권심판론’ 공존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상충적 유권자들은 누구고 얼마나 존재했나?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양면성과 상충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2]에서 서울/경기지역 794명의 패널을 분석해보면 52.9%가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47.1%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은 65.1%였고, 정권심판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9%로 나타나 정권심판론의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축 각각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교차해보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층이면서 정권심판론에 반대하는 ‘친MB안정론자’, 대통령 국정 지지층이지만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친MB심판론자’, 대통령 국정 비판세력이면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반MB심판론자’, 대통령에 비판적이면서 정권심판에도 반대하는 ‘반MB안정론자’의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3차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전체 패널 응답자 794명을 기준으로 보면 MB 국정평가와 정권심판론에 대해 일관된 양극단을 대표하는 것이 ‘친MB안정론자(250명)’와 ‘반MB심판론자(347명)’로서 각각 전체유권자의 31.5%, 43.7%다.

반면 양면적 태도로 분류되는 나머지 두 유형 중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이면서 정권심판론에도 비판적인 ‘반MB안정론자’는 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4%에 불과했고,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내는 소위 ‘친MB심판론자’는 170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2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수도권 유권자의 5명 중 1명은 MB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선거에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친MB안정론자’와 ‘반MB심판론자’의 비중이 12.2%p 차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심판 대 안정 중 어느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판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反야당성향의 反MB심판론자도 양면적 유권자, 전체유권자의 17.5% 달해

반MB 심판론자 중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유권자 중 상당수가 현존하는 야당세력에 대한 실망하여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올 1~4월까지 여론조사 결과들만 살펴봐도 대통령 국정지지층의 55~65%가 한나라당을 꾸준히 지지했지만 MB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유권자 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5~39%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모두 합쳐야 5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하는 수준이었다. 즉 반MB성향의 유권자들 중 절반은 현존하는 야당 진영에 대한 지지를 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당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반야당성향의 반정부심판론자’의 규모와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반MB심판론자’ 374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하여 반한나라당 연합에 참여한 정당(민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와 지지정당이 없거나(무당파) 반한나라당 연합(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지지자를 구분하여 보았다. ‘반MB심판론자’ 374명 중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반한나라당 연합에 참여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208명(59.9%) 수준이었고 나머지 139명(40.1%)는 여도 야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거나 한나라, 자유선진당 등 다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체 유권자(794명)를 기준으로 17.5%에 달하는 규모로서 21.4%에 달하는 친MB심판론자와 함께 38.9%가 정부와 야당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였고 이들의 선택은 선거막판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규모라 할 수 있다.

반면 ‘친MB안정론자’ 중에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양면적 성향의 유권자이다. 그러나 수도권 ‘친MB안정론자’ 250명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결집도가 높았다. 이들 중 80.0%인 200명이 한나라당 지지를 밝혔다. 20.0% 수준인 50명만 친MB안정론을 지지하면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층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양면적 성향의 유권자들 유형 중에서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유형은 ‘친MB심판론자’ 및 ‘반MB심판론자 중 현존 야당에 비판적인 집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제 이들의 투표선택을 살펴볼 차례다.

양면적 유권자의 투표선택

D-7. 한나라당 쏠린 친MB심판론자, 실제 투표에선 균형 잡아

[표3]과 [표4]에서 투표 일주일 앞둔 시점의 제2차 패널조사결과를 보면, ‘친MB안정론자’들은 오세훈 후보(83.6%)와 김문수 후보 지지 결집도(81.0%)가 높았고, 반대로 ‘반MB심판론자’들의 경우 한명숙 후보(64.2%)나 유시민 후보 지지 결집도(66.7%)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구나 이 시기에 양면적 태도를 가진 ‘친MB심판론자’ 중에선 오세훈(46.6%), 김문수 후보(60.6%) 지지로 쏠려 있었다. 반면 한명숙 후보 지지는 19.2%, 유시민 후보 지지는 18.2%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반MB심판의 여론이 친MB안정론보다 많았지만, 후보 지지율에서는 ‘친MB안정론자’들과 ‘친MB심판론자’들을 여당 지지로 끌어 들임으로써 지지율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앞서나가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후 선거직후 조사한 3차 패널조사에서는 ‘친MB심판론자’와 ‘반MB심판론자’중에서 급격한 변화가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친MB심판론자’ 중 한명숙 지지가 19.2%에서 39.4%까지 상승했다. 이들 집단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는 47.9%로 한명숙 후보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는 있지만 2차 조사시점에 비해서는 지지 격차가 매우 근접할 정도로 큰 추격을 허용했다. ‘반MB심판론자’들 중에서도 2차 조사에 비해 7.4%p 상승한 71.6% 지지율을 기록하여 이들 집단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 격차를 크게 벌렸다.

경기지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 ‘친MB안정론자’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차 조사에서 81.0%, 2차 조사에서 82.1% 지지를 유지한 반면, 2차 조사까지만 해도 ‘반MB심판론자’ 중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66.7%에 그쳤다. 그러나 3차 조사시점에서는 유시민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81.8%로 급상승하면서 역시 김문수 후보와 표차를 늘렸다. ‘친MB 심판론자’ 가운데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던 반면 유시민 후보 지지율은 18.2%에서



28.6%로 10%P 가량 상승하여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다. 이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에는 ‘친MB심판론자’ 및 ‘반MB심판론자’들 사이에서 한명숙, 유시민 후보 지지율 결집과 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 서울 유권자 유형별 지지후보 변화

조사 시기 (총 396명)	선거전 제2차 조사(5.24-26)				선거직후 제3차 조사(6.3-5)			
	오세훈	한명숙	미결정	기타	오세훈	한명숙	기권	기타
친MB안정론 (135명)	83.6	1.5	13.4	1.5	79.3	5.2	11.1	4.4
반MB심판론 (176명)	13.1	64.2	13.6	9.1	9.1	71.6	10.2	9.1
친MB심판론 (71명)	46.6	19.2	26.0	8.2	47.9	39.4	9.9	2.8
반MB안정론 (14명)	13.3	46.7	33.3	6.7	28.6	42.9	14.3	14.3

[표4] 경기 유권자 유형별 지지후보 변화

조사 시기 (총 397명)	선거전 제2차 조사(5.24-26)				선거직후 제3차 조사(6.3-5)			
	김문수	유시민	미결정	기타	김문수	유시민	기권	기타
친MB안정론 (117명)	81.0	6.9	10.3	1.7	82.1	8.5	8.5	0.9
반MB심판론 (170명)	9.4	66.7	18.1	5.8	7.1	81.8	7.6	3.5
친MB심판론 (98명)	60.6	18.2	14.1	7.1	60.2	28.6	10.2	1.0
반MB안정론 (12명)	33.3	41.7	25.0	0.0	41.7	33.3	25.0	0.0

反야성향 反MB심판론자의 전략적 선택

또 다른 상충적 유권자로 분류되는 ‘반야성향의 반MB심판론자’들의 투표선택을 ‘야당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던 반MB심판론자’와 비교해보았다. 가정대로라면 야당지지성향의 심판론자보다 여당지지도나 무당파성향의 심판론자들이 선거 막판에 야당후보 지지를 선택했어야 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반MB심판론자’ 346명을 선별하여 이들의 반한나라당 선거연대에 참여한 야당에 대한 지지여부로 그룹핑하여 2차와 3차 조사 시기 지지후보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예상대로 ‘반MB심판론자’ 중 반한나라당 성향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는 오세훈/김문수 등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2차 조사에서 4.5%, 3차 조사에서 4.8%로 변화가 없었고, 한명숙/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2차 조사에서 78.6%, 3차 조사에서 85.6%로 7.0%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들은 2차 조사 시점에 이미 상당부분 이미 야당후보로의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투표일까지의 표심변화는 크기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반야당성향의 반MB심판론자’들의 경우 2차 조사시점만 하더라도 한명숙/유시민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45.5%로 과반수에 못 미쳤다. 이들은 반MB정권심판이라는 반정부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존 야당에 대한 불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2차 조사에서 오세훈/김문수 후보 지지가 21.3%였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 오세훈/김문수 후보 지지는 13.0%로 8.3%p 감소한 반면 한명숙/유시민등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62.3%로 16.8%p나 증가했다. 주로 현존 야당들에 대한 지지를 주저하던 반야당성향의 상층적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특정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5] 수도권(서울/경기) 반MB심판론자 중 야당에 대한 태도별 지지후보 변화

서울/경기 (총 346명)	선거전 제2차 조사(5.24-26)				선거직후 제3차 조사(6.3-5)			
	오세훈 김문수	한명숙 유시민	미결정	기타	오세훈 김문수	한명숙 유시민	기권	기타
야당지지층 (208명)	4.5	78.6	10.1	6.8	4.8	85.6	4.6	5.0
反야당성향 (138명)	21.3	45.5	24.1	9.0	13.0	62.3	16.0	8.7

양면적 유권자일수록 투표일 임박하여 지지후보 결정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이변을 숨은 표가 아닌 투표결정에 주저하던 양면적 유권자들의 선거 막바지에 야당후보 지지로 표심이 쏠린 결과라고 한다면 이들의 지지후보 결정시점이 바로 선거 일주일 전후의 시기였어야 한다. 실제로 응답자 유형별 투표결정 시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정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6]에서 역시 ‘친MB안정론’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투표 한 달 이전에 지지할 후보를 정한 비율이 48.2%였고 투표 2주전에 실시한 후보자 등록 시기에 정했다는 응답도 22.8%로 무려 71.1%는 이미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MB심판론자’의 경우 내부에 반야당성향의 유권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해서야 지지후보를 정한 경우가 많았다. 1주일 전 결정했다는 응답이 24.8%, 2-3일전에 결정했다는 응답 22.0%, 투표당일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도 6.3%로, 절반이 넘는 52.1%가 선거 일주일 이내에서야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양면적 성향의 ‘친MB심판론자’의 경우 투표 1주일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이 18.4%, 2-3일전 결정했다는 응답이 23.7%,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0.3%로 역시 과반수가 투표 1주일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특히 ‘반MB심판론자’ 중에서도 지지하는 야당이 없는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투표 일주일 전 지지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23.2%, 2-3일 전이 27.7%였고, 투표 당일에 결정했다는 응답도 12.9%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하는 유권자의 64%가량이 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결국 이들의 투표성향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야당 후보 지지로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7] 참조할 것).



[표6] 유권자 유형별 투표후보 결정시기

최종 투표자 (714명)	선거직후 제3차 조사(6.3-5)				
	투표당일	2-3일전	투표 1주일 전	후보자 등록	투표 한 달 전
친MB안정론 (225명)	3.5	11.6	13.8	22.8	48.2
반MB심판론 (315명)	6.3	22.0	24.8	18.6	27.6
친MB심판론 (153명)	10.3	23.7	18.4	19.7	28.0
반MB안정론 (21명)	15.3	21.1	21.3	7.1	35.2

[표7] 반MB심판론자 중 야당지지여부에 따른 투표결정시기

반MB심판론 최종 투표자 (315명)	선거직후 제3차 조사(6.3-5)				
	투표당일	2-3일 전	투표 1주일 전	후보자 등록	투표 한 달 전
야당지지층 (199명)	2.4	18.7	25.8	23.6	28.5
反야당성향 (116명)	12.9	27.7	23.2	10.2	26.0

맺으며 : 막판 쏠림의 원인과 선거결과의 정치적 함의

선거 막바지에 나타난 유권자의 표심변화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시사점을 준다.

여당의 경우 정부여당에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공히 가지고 있던 양면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선거 마지막 왜 정부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었는지 깊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후보경선이 완료된 투표 2주전부터 투표 직전까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초중반까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은 쉽지 않은 싸움임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몸 낮추기 전략이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친노 성향의 유시민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전후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 소식에 고무된 시점에 선거 중후반에 3대 대야권 공세가 부각되었다.

‘MB정부 심판론’에 맞선 ‘전정부 심판론’, 야권의 ‘무상급식’에 맞선 ‘전교조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심판론’의 부각, ‘선부른 예단을 피하자’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온 정부여당이 20일 ‘천안함 발표’ 이후 진행한 ‘안보공세’가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도하지 않게 중도적, 양면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오히려 반대쪽으로 균형 잡기에 나서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발표에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MB심판론자’는 무려 90.7%가 그렇다고 보았고, ‘친MB심판론자’들의 66.8%가 동의했다. ‘친MB안정론자’에서만 31.8%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민노총가입 134명 전교조교사 해임에 대해서도 ‘반MB심판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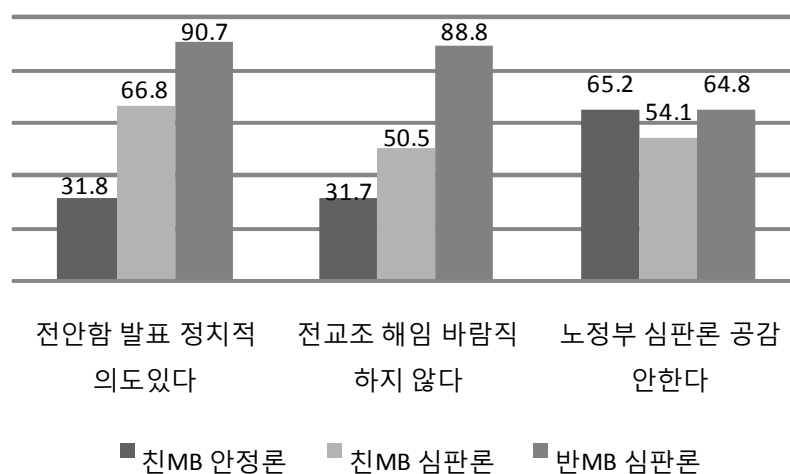


의 88.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 ‘친MB심판론자’들도 과반수인 50.5%가 공감하지 않았다. ‘친MB 안정론자’들 중에서만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31.7%로 낮았다. 한편 ‘친노심판론’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 특히 ‘친MB안정론’ 층에서조차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았다. 무려 65.2%가 이에 부정적이었다.

결국 선거 중후반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세전략이 대체로 핵심지지층 이외 집단에 반감과 견제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잡고 있던 정부여당이 국정실패에 대해서는 전임정부를,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전교조를, 안보문제에서는 북한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념적 반대진영’을 압박하는 전략이 정부여당의 지나친 보수화 및 독주정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야권도 선거결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이 야권에 주는 메시지를 곱씹어야 한다. 앞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한나라당이 선거 후반에 전략적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최종 투표결정시점에서 양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여당의 공세전략에 대한 균형잡기에 나서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자력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호소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심지어 ‘반MB심판론자’와 같은 야권의 핵심적인 지지층도 선거 막바지까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주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야권으로서는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야당성향의 유권자 표가 많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진단보다는 왜 반MB성향의 유권자들이 현 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숨은 표 논란에 빠져 유권자가 정치권과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유권자의 손가락 끝이 아닌 그것이 향하고 있는 달을 보는 지혜가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3] 한나라당 주요 선거 캠페인에 대한 유권자 유형별 평가 : 서울/경기 제3차 조사





EAI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치권 · 학계 · 언론계에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태도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선거 보도 및 선거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교의 연속성을 위해 2006년도 패널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방선거패널조사는 조사대상과 활용 목적에 따라 ① 5개 지역 패널조사(3회) ② 전국단위 패널조사 (2회)로 이원화 하여 진행한다.

① 5개 지역패널조사 : 서울/경기/경남/전북/충남 판세변화 및 선거결과 예측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각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전북/충남/경남 지역 유권자 대상의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서울과 충남은 2006년 조사를 진행했던 지역이며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조사지역에 포함되었다. 지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지역별로 600명을 구성하여 총 3회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시	5월 10일~13일(4일간)	5월 24~26일(3일간)				6월 3일~5일(3일간)			
모집단	지역별 19세 이상 성인	지역별 19세 이상 성인				지역별 19세 이상 성인			
표본크기	총 3,000명(각 600명)		원패널	추가	총		원패널	추가	총
		서울	410	40	450	서울	365	0	401
		경기	389	63	452	경기	342	0	400
		충남	397	89	486	충남	315	0	373
		전북	385	65	450	전북	345	0	400
		경남	391	59	450	경남	347	0	402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비례 할당	1차 조사 + 누락 분 추가				2차조사자 전수조사			
표집오차	95%신뢰수준 \pm 4.1%P	95%신뢰수준 \pm 4.6%P				95%신뢰수준 \pm 4.9~5.1%P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100%	64.2~68.3%				52.5~61.8%			

② 전국패널조사 : 중앙정치 및 차기 권력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주

전국단위 패널조사는 선거 전후 2회를 실시하여 지난 대선 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와 현 정부 후반기 집권전략, 2012년 권력재편에 미칠 파장을 집중 탐색한다. 전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2007년 대선패널, 2008년 총선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1,200명 규모의 패널을 구성하여 이전 선거 이후 2회 유권자 태도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일시	5월 4일~6일(3일간)	6월 3일~5일(3일간)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1,200명	904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표집오차	95%신뢰수준 \pm 2.8%	95%신뢰수준 \pm 3.3%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	75.3%	



패널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정외과)

연구진

이내영 (연구팀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권혁용(고려대 정외과), 김성태(고려대 언론학부), 김민전(경희대 교양학부),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 유성진(이화여대 BK21),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임성학(시립대 정외과), 지병근(조선대 정외과),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언론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조사연구팀

김춘석(한국리서치 수석연구부장), 임석빈 (한국리서치 과장)

Ⅰ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Ⅰ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Ⅰ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